

스웨덴 2006년 총선과 사민주의의 함의

최 언혁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 정치학과)

1. 들어가는 말
2. 2006년 총선 분석
3. 우익정권의 정책변화
4. 스웨덴 사민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들어가는 글

스웨덴 총선은 국내외의 많은 관심과 논란을 양산해 냈다. 1994년 이후 지배해 왔던 사민당이 패배하고 우익보수 연립정당이 승리한 것을 두고 실패한 복지모델의 국민적 심판이라고 단정짓기도 하고,¹ 우익보수정권이 승리를 하기는 했어도 수상 요란페손의 심판 혹은 경제 비효율에 대한 평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스웨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약간의 수정만 가할 뿐 큰 변화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도 있었다.² 이 글은 선거결과와 그 의의를 다시 한번 반추해 보기 위한 시도이다. 사민당의 전통적 특징과 사민당의 정치사상적 변화와 당내 좌우파의 대립과 갈등 구조 등의 당내의 변화와 역학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그것이 선거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 연구에서 배제된다. 이 글의 초점은 스웨덴 중도우익 4개 정당들의 보수연합의 승리는 과연 무엇에 기인하는지, 보수연론들의 주장처럼 국민들의 복지제도의 비판 등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효율적인 운영의 문제 즉 소프트웨어의 문제였는지, 보수연합정권의 지배하에서 복지제도가 과연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선거패배 이후 사민당의 진로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이 글은 선거 당일 스웨덴 국영TV SVT와 스웨덴 통계국 (SCB)가 함께 실시한 출구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스웨덴 좌익계열 정당인 사민당(s), 좌익당(v), 환경당(mp) 각각의 선거공약 및 보수당(m), 국민당(fp), 중앙당(c), 그리고 기독교민주당(m) 등

¹ Financial Times, 2006 9월 17일자 인터넷 신문; New York Times, 2006. 9월 18일자 인터넷 신문; 조선일보, 2006년 9월 18일자; 동아일보, 2006 9월 18일자; 중앙일보, 2006 9월 18일자.

² Dagens Nyheter, 2006년 9월 18일자 인터넷 신문; Svenska Dagbladet, 2006년 9월 18일자 인터넷 신문; 한겨레 신문, 2006 9월 20일자; 레드앙 인터넷신문, 2006. 9. 20일. 주간동아, 2006. 10. 10일자.

으로 구성된 4개 중도보수연합이 공동으로 발표한 선거공약, 스웨덴 일간지의 선거분석 및 보도자료, 그리고 스웨덴국영방송의 선거관련 보도프로그램, 그리고 2006/2007년 예산안, 그리고 각종 통계를 중심으로 쓰여졌다.

2. 2006년 총선분석

이번 선거는 시작 전부터 1994년 이래 집권해 왔던 사민당이 4개정당으로 구성된 중도보수 그룹인 스웨덴을 위한 연합(Alliance för Sverige)의 도전을 받아 승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던 선거였다. 결과적으로 사민당은 1920년 이후 가장 낮은 득표율인 35.2퍼센트로 나머지 중도좌익 정당인 좌익당 5.8퍼센트, 그리고 환경당 5.2퍼센트를 합쳐 46.2퍼센트를 얻어 4개정당 연합의 48.1퍼센트에 뒤져 정권을 중도보수연합 4개당에 넘겨주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승자와 패자간의 차이가 단 1.9퍼센트에 불과한 박빙의 승부였다. 스웨덴의 선거제도는 310석의 고정석수와 39석의 추가석으로 구분되는데 4퍼센트의 최저득표율의 넘지 못한 군소정당들은 일차배분에서 탈락하고 나머지 의회에 진출한 정당들에게 이 39석이 분배되어 결과적으로 4개 보수우익연합은 51퍼센트로 의회의석의 과반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는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 과연 이번 선거가 복지제도의 실패를 심판한 성격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결과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1. 스웨덴 2006년 선거결과: 득표율, 의석수, 의석점유율

	득표율	의석수 () ¹	의석점유율
사민당(s)	35.2	130(144)	37.2
좌익당(v)	5.8	22(30)	6.3
환경당(mp)	5.2	19(17)	5.4
보수당(m)	26.1	97(55)	27.8
국민당(fp)	7.5	28(48)	8.0
중앙당(c)	7.9	29(22)	8.3
기독교민주당(kd)	6.6	24(33)	6.9
합계	94.3 ²	349(349)	

출처: <http://www.val.se/val/val2006/valnatt/R/rike/roster.html> . 2006-11-12 (스웨덴 선거관리청 공식웹페이지)

1. 2002년 선거 의석수
2. 기타 정당이 나머지 5.7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의회진출을 위한 최소득표율인 4퍼센트를 넘은 정당이 없었다.

먼저 각 당의 선거공약을 비교해 보자. 아래의 표에서 보듯 사민당과 좌익당, 그리고 환경당으로 구성되는 좌익 정당들은 공공섹터의 확장과 사회약자 특히 연금생활자의 삶의 질의 확대와 소외계급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성 보조금의 확대를 주장한 반면,

4 개 우익정당 들은 스웨덴 정당사에서 최초로 공동으로 내 놓은 선거공약에서 개인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그 중에서도 부모의 자식보육을 유도하기 위한 보육세 신설,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주세 폐지, 불합리한 주택세의 폐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보조금을 인하하고 반대로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소득세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선 보였다. 아래 표에서도 보여지듯이 좌익계열 정당 들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확대와 소외계급을 보호하는 공약을 내 놓은 것과 비교 되는 것은 우익정당들도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정책으로 서민유권자들을 공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치과치료비 지원, 치과예방조치 비용 지원 등 최근 들어 높은 치료비 때문에 저소득층 가족이 치과방문을 기피해 치아의 건강이 계급문제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공약이다.

표 2. 2006 년 스웨덴 선거에 임한 각 당의 공약비교

정당	중요한 정책
사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신산업 - 스웨덴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2020 년까지 화석연료 종식 ● 24 세까지 치과치료비용 무료, 치과방문 최대 200 크로네. ● 300,000 연금생활자 의료확대 (의료, 보호자지원, 치매연구 등; 100 억 크로네 배정) ● 연금생활자 주택보조금 인상 (월세의 91%에서 97%) ● 연금생활자 보조원 10,000 명 추가 고용 ● 탁아소 요금상한제 1260 크로네에서 960 크로네로 인하; 3 세를 위한 무료 탁아소신설 ● 실업기금 인상 ● 방과후 프로그램 요금 인하 840 크로네 에서 500 크로네로 인하 (첫째 자녀) ● 학생학업보조금 인상
좌익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00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 20,000 호 임대주택 건설 ● 65,000 호 임대주택 개량 ● 친환경적 교통시설 확대 ● 동일임금 일일 6 시간 노동 - 줄어든 시간만큼 고용확대 ● 최저임금인상 ● 복지제도의 사영화 금지 ● 고소득자 소득세, 자본수익세 인상
환경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아동선언 스웨덴 법제화 ● 15 년 이내 화석연료 종식시키고 대체연료 개발 ● 창업회사지원; 여성창업자 지원 ● 공공분야 40,000 명 고용(학교, 문화시설, 보건소, 양로원, 탁아소) ● 벤처기업행정지원 ● 1 년 자유년 (일종의 연구년제) 유지 - 청소년 등 최초 고용 용이 ● 주 35 시간 노동 ● 스톡홀름 시내 통행세 신설 ● 유류세 인상 ● 학생학업보조금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연금생활자 보조금 인상 (가정방문보조 강화)
스웨덴을 위한 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인하 ●실업보조금 80%에서 70%로 인하 ●병가보조금 인하 ●주택세보유세, 재산세 임기기간 내 폐지 (450 억 배정) ●보육세 가족당 최소 3,000 크로네 지급 ●탁아소 설치운영 (본인 자녀 및 타 부모자녀; 8 억크로네 배정) ●치과치료비용보조 (19 억크로네 배정) ●치과예방조치 (8 억크로네 배정) ●서비스업종 고용주세 폐지 (미용실, 자동차정비소, 청소용역회사 등; 35 억크로네 배정) ●출산휴가 보너스제 (봉급이 더 많은 남성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3,000 크로네 정도를 여성에게 지급해 주는 제도도입; 12 억 크로네 배정) ●탁아소 교육내용강화 (5 억 크로네 배정) ●가정보조원 고용세 인하

출처: Allians för Sverige, *Fler i arbete mer att dela på. Valmanifest 2006*. 더 많은 일자리로 더 많이 나누어 갖자; Socialdemokraterna, *Valmanifest 2006. Alla ska med. Modu 함께 합시다*; Vänsterpartiet, *Arbete Demokrati Rättvisa. Vänsterpartiets valplattform 2006*. 일자리 민주주의 정의; Miljöpartiet de gröna, *Grönare Sverige - för ökad livskvalitet*. 보다 더 환경적 스웨덴 한층 높은 삶의 질; Sverige Television, Valdebatt, 2006-09-15; Dagens Nyheter, 2006-09-15.

그렇다면 각 당의 선거공약에서 어떤 공약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까?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평가는 과연 어느 당의 선거공약이 인기를 끌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아래의 그림 1 에서 보듯이 2006 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정책은 역시 고용이었다. 선거당일 스웨덴 국영 TV 에서 실시한 출구조사에서 나타난 자료는 유권자의 정당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었는데 대한 질문에서 56 퍼센트의 유권자가 고용문제라고 답함으로써 선거에서 고용문제를 이슈화하는데 성공한 우익연합 중에서도 줄곧 이 문제를 이슈화한 라인펠트의 보수당이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공약사항은 학교, 의료, 경제 등의 순으로 학교 이슈 역시 국민당이 가장 중요시 했던 사안이었고, 의료의 개선 역시 우익연합이 개인의 선택권과 효율성의 중대를 앞세워왔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우익연합이 우세한 형국이다. 유권자가 정당선택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이슈로 생각한 내용이 사민당이 이룩한 높은 경제성장, 소비자물가 등의 거시경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슈의 선점화에서 열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당과 좌익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안이었던 에너지문제, 환경개선 등은 16 개 이슈 중에서 11 위와 13 위를 차지하고 있어 좌익계열의 정당 들이 선거기간 중 유권자 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

³ 2002년의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정당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교육, 보건 등의 전통

그림 1. 정당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사안

valet 06 Viktiga frågor för partivalet

fråga: "Vilken betydelse hade följande frågor för Ditt val av parti i riksdagsvalet idag?"

	1998	2002	2006	Förändring 2002-2006
1 sysselsättning	58	51	56	+5
2 skola	59	67	54	-13
3 sjukvård	55	64	51	-13
4 svensk ekonomi	57	56	50	-6
5 äldreomsorg	46	53	45	-8
6 egen ekonomi	-	-	44	-
7 lag och ordning	40	47	41	-6
8 barnomsorg	43	53	41	-12
9 jämställdhet	36	44	37	-7
10 företagets villkor	32	32	35	+3
11 energi/kärnkraft	30	29	35	+6
12 skatter	36	36	32	-4
13 miljö	27	34	31	-3
14 flyktingar/invandring	19	32	25	-7
15 utrikes/säkerhet	-	30	23	-7
16 EU/EMU	28	28	20	-8

Jämförelse av väljarnas viktigaste frågor 1998-2002-2006

Source: Swedish Television, Exit Poll, 2006-09-17.

설명: sysselsättning(고용); skola(학교); sjukvård(의료); svensk ekonomi(스웨덴 경제); lag och ordning(법과 질서); barnomsorg(아동복지); jämställdhet(평등); företagets villkor (경영조건); energi/kärnkraft(에너지/핵발전); skatter(세금); miljö(환경); flyktingar /invandring(정치망명/이민); utrikes/säkerhet(외교/안보); EU/EMU

사민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최근의 거시적 경제지표에 안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총선 1 주일 전 프레트릭 라인펠트와의 TV 토론에서 요란페손은 스웨덴 경제가 다른 유럽국가와 OECD 국가들보다도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물가상승률, 높은 노동생산성을 들으며 스웨덴 경제는 건실했고, 최근 2 년 동안 45,000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서 전체 실업률이 5.6 퍼센트로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주장한 반면, 라인펠트는 거시경제지표보다는 체감경제, 즉 병가결손일수가 유럽에서 가장 높고 일자리가 없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체념하고 국가에서

적 복지문제가, 1998년 선거에서도 학교, 고용, 경제 등의 이슈가 정당의 중요한 관건이었다.

주는 실업수당을 선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싶어도 고용주세가 높아 창업의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간의 격차보다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간의 격차와 갈등이 더 심각한 것으로 규정하고, 일자리 창출이 더욱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⁴ 최대 일간 신문인 Dagens Nyheter 는 폐손은 지금까지 이룩해온 경제지표로 유권자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 라인펠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혁, 아동정책, 가족정책 등 굵직굵직한 4 개정당의 정책 공조 안을 내놓음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더욱 많은 호감을 샀다고 지적하고 있다.⁵

따라서 선거에서 어떤 이슈를 선거공약으로 내놓고 유권자를 설득하고 문제를 부각시키느냐의 성공여부가 선거 승리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된다. 사민당은 최근 유럽연합 25 국(European Union)과 유로존(EURO Zone) 12 개국 보다 훨씬 높은 경제성장률은 기록했지만 실업재취업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교육생 특히 청소년 실업까지 포함한 실업률을 계산할 때 17 퍼센트까지 올라간다는 우익정당들의 지적을 단순히 실업보험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사회보장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을 효과적으로 마련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경제가 좋으면 집권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통념을 깬 선거였다는 점과 사민당의 실업대책, 특히 청소년 실업대책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선거의 패배에 미쳤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이유로 사민당의 지지층인 노조의 분열을 들 수 있다. 선거당일 출구조사의 분석에 따르면 55%의 전국노조연맹(L0)회원만이 사민당을 지지하면서 전통적으로 70% 수준이었던 지지층을 잃으며 자멸했다는 분석이다.⁶ 스웨덴의 89%에 이르는 노조가입률을 감안할 때 전통적 사민당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큰 패인의 하나로 꼽힌다. 노조원들의 표는 과연 어디로 흘러갔을까? 아래 그림 2 를 보면 명확히 들어난다. 선거당일 출구조사에 따르면 사민당의 지지자 중 2.6%가 보수당을 지지했고, 나머지 중도보수당 들 1.9%를 지지하는 등 총 4.5%에 해당하는 사민당 지지층이 우익정당 들에게 흘러 들어감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민당의 표의 감소는 그대로 우익정당 들의 세 불리기로 이어지면서 패배의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사민당뿐만이 아니고 좌익당의 세력약화는 사민당 중심의 정권수립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 글의 맨 뒤에 위치시킨 별첨 1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998 년 선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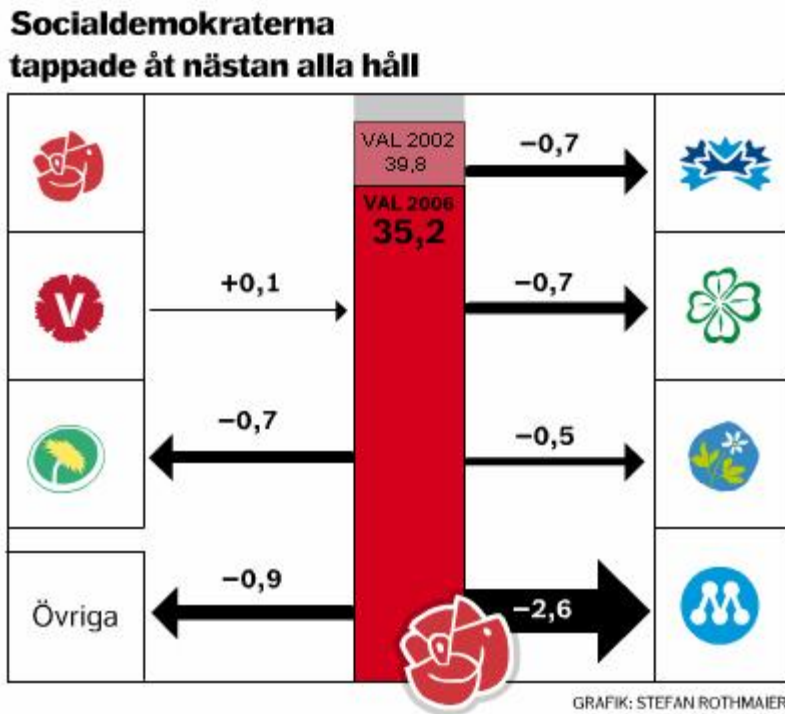
⁴ Sveriges Television, Valdebatt (Election debate). 2006-9-10.

⁵ Dagens Nyheter, 2006-09-11일자 인터넷 신문.

⁶ Dagens Nyheter, 2006-09-17일자 인터넷 신문. 이를 뒷바침 하는 것은 사민당이 과반수를 얻었던 1968년 선거에서는 노조가입회원 중 74퍼센트가 사민당을 지지하는 표의 응집력을 보여준 반면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우익정당 들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던 1976년 선거에서는 노동자지지율이 62퍼센트에 그침으로써 노동자 표의 결집력이 높을 때 사민당이 선거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Gerassimos Moschonas, *In the Name of Social Democracy*. 1994, London: Verso, p. 42를 참조.

좌익당의 지지율은 12 퍼센트, 그리고 2002 년 선거에서는 8.4 퍼센트로 사민당이 소수내각을 수립할 때 중요한 정책공조의 파트너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5.8 퍼센트로 급락함으로써 사민당과 함께 잃은 지지율을 합하면 7.3 퍼센트에 이른다. 즉 좌익당이 하락한 것만큼이라도 사민당의 지지로 이어졌거나 환경당 쪽으로 이동했다면 정권을 우익정당들에게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림 2. 사민당의 표이동



Source: Swedish Television. Exit Poll, 2006. 9. 17.

설명: 위의 로고 중 빨간장미는 사민당, 빨간 바탕의 꽃에 V 자는 좌익당, 초록원형바탕에 노란민들레는 환경당, 파란 카네이션은 국민당, 네잎 클로버는 중앙당, 파란바탕에 흰 꽃과 앞사귀는 기독교민주당, 그리고 M으로 표현된 정당은 보수당, Övriga 는 기타 정당

반면 보수당, 국민당, 중앙당, 그리고 기독교민주당 등 4 개 우익정당들은 2 년전부터 꾸준히 재집권을 위한 구호 “스웨덴을 위한 연합 (Allians för Sverige; Alliance for Sweden)”의 기치를 앞세워 1991 년 이후 처음으로 정권을 재 탈환하기 위해 유권자를 공략해 왔다. 이미 선거 2 년 반 전인 2004 년 7 월 모드 올로프손(Maud Olofsson) 중앙당 당수의 개인저택에서 4 개 정당 당수 들이 모여 스웨덴을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동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을 약속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대안 정권으로서의 시동을 걸었다. 이 때부터 4 개당의 분야별 정책수석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정책의 시각 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2005 년 7 월에는 기독교민주당 당수의 개인저택에서 만나 구체적인 선거공약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스웨덴 선거역사상 처음으로

우익정당 공동의 선거공약을 발표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4 개 당의 가장 어려웠던 정책 사안이었던 핵발전소 폐기문제였는데, 1980 년 국민투표를 추진했던 중앙당의 선거전까지의 입장은 핵발전소 12 기중 2 기가 폐기되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머지 핵발전소도 폐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올루프손 중앙당 당수가 전폭적으로 이 사안을 4 개정당 공조체제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않기 위해 앞으로 핵발전소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경제적 가치가 있을 때까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하면서 4 개 정당의 협조관계 유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⁷

반면 사민당은 우익정당 들의 공조체제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으며 우익정당 들이 집요하게 요구한 좌익계열 정당 들의 연립정권 구성에 대한 입장차이가 유권자 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선거 이틀 전에 있었던 정당 당수 TV 토론에서 우익정당들이 요구한 정부구성에 대한 입장표명에서 좌익당과 환경당은 연립정권에 참여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 반면 사민당은 두 정당이 취하고 있는 반 EU 정책과, 사민당의 좌익당에 대한 전통적 적대관계를 이유로 정책공조만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눈에는 우익정당 들은 공조체제가 확고하지만 좌익계열의 정당들은 일률적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점으로 지적된다.⁸

신뢰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사건은 사민당이 마지막 선거운동 1 주일을 남겨놓고 중대한 패인으로 작용한다. 첫째,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2004 년 12 월의 27 일의 쓰나미 대재앙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유도 사민당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2004 년에 발생한 쓰나미 대재앙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자. 2004 년 인기 휴양지인 태국으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갔었던 스웨덴 관광객이 쓰나미 대재앙을 통해 최종집계에서 544 명이 사망하고 18 명의 실종되는 상황에서 외교부의 능력 대처와 외교부장관의 상황판단 미숙이 피해자 가족의 분노를 사게 만들었다. 구조 및 후송지원을 늦게 보낸 것이 바로 외교부의 보고체계와 수상의 인지와 역할에 대한 끊임없는 추측이 난무했고, 2006 년 3 월 쓰나미 재해조사위원회(Flodvågskatastrof haverikommissionen; Swedish Board of Accident Investigation) 조사보고서와 2006 년 이어서 진행된 의회헌법위원회 청문회에 직접 출두한 요란 페손의 증언에서 외교부의 지휘권 문제만 부각시켰을 뿐 역할분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공신력이 결정적으로 실추되었다.⁹ 끝내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정책비서를 사임시켰으며 다른 문제와

⁷ <http://www.maktskifte.se/index.htm>. 이 사이트는 스웨덴을 위한 연합 4개당의 공식사이트로서 공조체제 하에서 공약, 기록물 들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⁸ 선거 당일 요란페손이 SVT에서 인터뷰한 내용도 바로 이점에 있다. 즉 그는 선거패배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대안의 실패와 안일한 정책대응의 실패를 들었다. SVT, 2006-09-17. 선거 중계방송.

⁹ Dagens Nyheter, 2006-3-30.

관계되기는 했으나 결국 이 문제로 외무부장관까지 경질시키는 등의 대 진통을 겪으며 수상의 신뢰가 많이 실추되었다. 그 이유는 수상의 눈치만보는 외교부의 비효율적인 대처와 외무부장관, 그리고 정책비서의 직무유기 등을 지적하며 권력의 경직성과 중앙통제에 대한 시민주의적 정치에 대한 혐오가 증폭되었다.¹⁰

둘째, 시민당의 신뢰가 추락한 또 다른 원인은 선거 1 주일전에 요란페손과 부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 저택이 스웨덴 TV1 의 도큐멘타리에 여과없이 방송되면서 평등의 정치를 지향하는 시민당의 당수가 그런 대 저택에서 군림하며 사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수상에 대한 반감이 급속도로 형성되었다. 선거 3 일전 SVT1 의 “Uppdrag Granskning”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요란페손의 대저택을 둘러싼 주민의 시각, 당의 중진들과의 인터뷰, 페손과의 인터뷰 시도 등을 통해 요란페손의 이중성, 즉 시민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인 평등성과 연대성이 본인의 대저택 소유와의 괴리감을 노정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은 쉽게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유권자들의 지역별 지지를 보면 어디에서 승부가 갈렸는지 알 수 있다. 별첨 2 에서 보듯이 전체 스웨덴 유권자의 20%를 차지하는 스톡홀름에서 보수당은 36%의 지지율로 시민당을 누르고 제 1 당의 지위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북부지방 Norrbotten, Västerbotten 등은 스웨덴의 철광석이 매장되어 있어 산업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전통적으로 시민당의 표밭이었고, 비교적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Västernorrland, Örebro, Blekinge 지역 등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40-50 퍼센트의 안정적 지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스톡홀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산층과 대도시 실업자를 집중공략한 보수우익정당 들의 일자리창출 전략은 이들 유권자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데 그대로 적중한 셈이었다.

또 다른 접근은 이번 선거의 결과를 다시 당일 출구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스웨덴 유권자의 달라진 선거행태를 통한 분석이다. 이 자료는 유권자들의 부동층의 크기, 선택한 정당을 결정한 시기, 정당간 교차 투표, 계급투표, 2002년-2006년 투표성향 비교 등을 통한 투표행태 등의 정보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정당선택에 있어 선거전 마지막 주 혹은 당일 결정한 비율이 35%까지 이르며 선거결과에 선거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최근 15년 간에 걸쳐 5번의 선거를 비교해 볼 때 스웨덴 유권자는 갈수록 유동적 유권자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은 매우 강하고 나이 든 사람의 경우 부동층 유권자 보다는 계급투표, 정당소속감 등의 전통적 유권자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동층 유권자 중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선거 막판까지 결정 못하고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¹⁰ Aftonbladet, 2005-12-27.

결정하는 비율이 2006년 선거에서는 39퍼센트까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선거가 박빙으로 승부 나기 때문에 부동층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시민당의 경우도 1991년과 2006년 선거를 비교해 보면 1991년에는 선거마지막 주에 시민당을 선택한 비율이 19퍼센트 정도에 그쳤지만 2006년 선거에는 26퍼센트까지 증가함으로써 전통적 시민당 지지층의 비율은 그만큼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특징으로는 군소정당 들일수록 부동층의 지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전통적 좌우 수장격인 시민당과 보수당의 부동층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즉 시민당은 26퍼센트, 보수당은 28퍼센트 나머지 군소 정당들은 40-50퍼센트의 수준을 보여준다.

표 3. 유권자 부동층 비율의 변화 (1991-2006)

fråga: "När bestämde Du Dig för vilket parti Du skulle rösta på i årets riksdagsval?"

idag/sista veckan	1991	1994	1998	2002	2006
samtliga	28	28	32	32	35
v	26	34	31	25	32
s	19	18	26	24	26
mp	58	48	45	48	52
c	33	36	37	43	51
fp	39	49	44	48	44
kd	35	43	48	39	43
m	21	24	24	25	28
övriga	46	58	44	30	45
18-21	38	42	50	44	50
65+	16	15	22	19	25
kvinnor	31	31	36	34	39
män	24	25	28	30	30

Source: Swedish Television. Exit Poll, 2006. 9. 17.

설명: samtliga (전체 유권자), v (좌익당), s(시민당), c(중앙당), fp(국민당), kd(기독교민주당), m(보수당), övriga(기타 정당), kvinnor(여자), män(남자)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선거당일에 지지할 정당을 결정한 유권자의 비율이 13%에 이르고 선거운동 마지막 주에 결정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21%를 차지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정당을 선택하지 못하는 유동적 유권자가 높은 이유로 해서 선거 전 마지막 토요일에 있었던 정당 당수간 TV토론이 매우 중요한 유권자 쟁탈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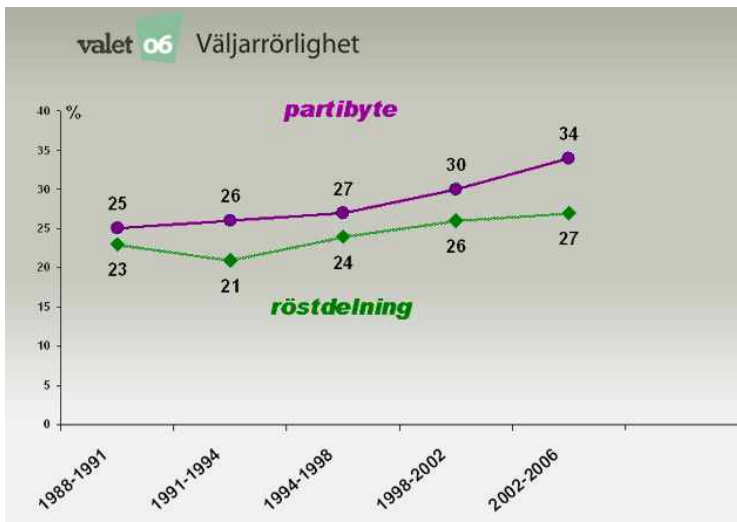
그림 3. 지지정당의 결정 시기: 선거운동 마지막 주 혹은 선거당일



Source: Swedish Television. Exit Poll, 2006. 9. 17.
 설명: sista veckan (선거마지막주); valdagen (선거당일)

둘째,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스웨덴 유권자들은 선거 때마다 정당을 바꾸는 경향이 높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34%의 유권자가 정당지지에 있어 2002년 때와 다른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선거의 불확실성이 이전 선거에 비하여 훨씬 높아졌다. 또한 지방선거에서의 지지정당과 의회총선거 지지정당과 불일치하는 경향이 이전의 선거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경향을 보인다. 27%의 유권자가 지지정당의 불일치 현상을 보여준다.

그림 4. 선거 간 지지정당 유동성과 지방-의회선거의 정당 교차지지도 (1988-2006)



Source: Swedish Television. Exit Poll, 2006. 9. 17.
 설명: väljarrörlighet(유권자 유동성); partibyte(정당교체); röstdelning(정당교차투표)

셋째, 가장 충성도가 높은 유권자 층을 확보하고 있는 보수당으로서 2002년 선거에서 보수당을 지지한 유권자 중에서 82%의 유권자가 계속해서 보수당을 지지함으로써 높은 충성도와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사민당의 경우 이보다 낮은 73%의 유권자가 충성도가 높은 사민당 지지자로 분류될 수 있다. 2002년 선거에서 사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 중 8%가 보수당을 지지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선거에서 패배하는 원인이 되었다. 반면 보수당의 경우 2002년 선거에서 보수당을 지지한 유권자중 14%가 다른 중도우익정당들에게 표를 던짐으로써 우익정당들의 우세를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타 중도우익정당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그림 4. 선거간 유권자 지지정당의 교체패턴 (2002-2006)

partival 2002	parti i riksdagsvalet 2006								summa procent
	v	s	mp	c	fp	kd	m	övriga	
v	53	17	11	2	1	1	4	10	~100
s	4	73	4	3	3	2	8	3	~100
mp	8	10	56	9	4	2	5	6	~100
c	1	7	2	65	4	5	13	3	~100
fp	0	5	2	14	42	5	29	2	~100
kd	0	4	1	7	6	58	20	3	~100
m	0	2	0	4	5	5	82	2	~100
övriga	3	13	3	3	4	6	17	51	~100
blankt	5	24	11	8	6	4	28	14	~100
ej röstande 2002	8	32	8	5	7	4	25	11	~100
ej röstberättigad 2002	10	28	12	7	8	3	26	7	~100

Source: Swedish Television. Exit Poll, 2006. 9. 17.

표 10. 직업별 정당지지 양태

valet 06 Social bakgrund - sysselsättning relaterat till partiröst

	parti i riksdagsvalet 2006								Summa procent
	v	s	mp	c	fp	kd	m	övriga	
förvärvsarb.	7	29	7	9	9	6	29	4	~100
arbetslös	10	43	8	5	4	4	18	8	~100
studerande	12	25	15	8	8	3	22	7	~100
arbetare	10	45	7	6	5	5	16	7	~100
tjänstemän	6	24	7	9	11	7	32	3	~100
jordbrukare	1	5	4	51	3	9	25	2	~100
företagare	3	14	6	10	8	8	46	6	~100
LO	10	54	5	5	4	4	11	6	~100
TCO	8	31	6	10	11	7	24	3	~100
SACO	7	20	11	12	13	7	27	4	~100

Source: Swedish Television. Exit Poll, 2006. 9. 17.

설명: förvärvsarb. (직업이 있는 유권자); Arbetslös (실업자); studerande (학생); arbetare (노동자); tjänstemän (사무직종사자); jordbrukare (농민); företagare (자본가); LO (전국노동자연합); TCO (사무직노동연맹); SACO (교직종사자연맹)

위의 표에서 보듯이 계급투표 양상은 아직까지 선명하게 스웨덴 정치에 남아있다. 즉 노동자 층의 사민당 지지(45%), 농민 중 중앙당 지지(51%), 그리고 자영업 이상 기업가 들의 경우 46%가 보수당을 지지함으로써 그 같은 양상은 발견되지만 7-80% 수준까지 갔던 7-80년대의 계급투표에 비하면 현저히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선거의 분수령이 되었던 노조가입자들의 낮은 사민당 지지율(54%)은 결정적으로 약화된 사민당의 입지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스웨덴 유권자 들은 점차 정당충성도 따라 투표하는 계급투표율과 정당일체감에 따라 투표하는 유권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효율적 선거운동과 이슈선점 그리고 정당당수의 역할과 이미지, 그리고 도덕성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박빙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선거에서 갈수록 부동층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는 점은 모든 유럽의 정치에서 발견되는 현상인데, 스웨덴의 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해 보면 선거의 결과는 복지제도의 실패에 대한 심판, 혹은 국민들의 사민주의로부터의 이탈이 주 요인은 아니었으며 사민당 장기집권에 대한 정치체제의 비효율성과 요란 폐손의 통치스타일에 대한 반감, 좌익계열 정당 들의 동시적 약화현상, 그리고 중도우익 4 개 정당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동선거전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민당은 여타 유로존 (Eurozone) 국가 들보다 높은 스웨덴의 국민총생산증가율과 낮은 물가상승률을 통계수치로 제시하며 경제만큼은 자신 있다는 안일한 선거전략을 펴왔지만 국민들은 경제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보았고 지지정당

선택 시에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는 점이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쓰나미사태에서 사민당 정부공신력의 타격, SVT 에서 선거전 방영된 대저택 보도 등이 사민당의 표를 잠식한 큰 변수였을 것이다. 더불어 여타 좌익계열의 정당들과 연합체제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선거기간 마지막 주에 투표한 정택을 선택했던 부동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도 실패함으로써 주도권을 중도우익정당 연합에게 넘겨주었다고 볼 수 있다.

3. 우익정권의 정책변화

그렇다면 새로 들어선 우익정권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가? 이미 선거공약에서 다른 내용과 큰 틀에서 벗어 날 것 같지는 않다. 라인펠트 정권이 2006년 10월 13일 발표한 2006/2007년 예산안을 보면 두 가지의 선명한 정책방향을 알 수 있다.¹¹ 즉 일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고용증대를 유도하며, 봉급대체율을 낮춰서 일하지 않는 사람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조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미 라인펠트 정권의 성패는 세계개혁을 통한 세수의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새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되어 복지제도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집권1년의 예산안은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라인펠트 정권의 예산안 편성이 과연 사민당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비교해 보면 정확히 얼마나 정책의 변화가 차이가 아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라인펠트 정권의 예산안 편성에서 전년도와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민정책 예산 삭감 (8), 병가 및 장애자정책분야(10), 노동시장정책(13), 교육 및 연구(16), 사회계획, 주택보급, 건설, 및 소비정책 (18) 등의 분야에서는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했고, 그 중에서도 병가보조금의 삭감 (16.5%에서 15.5%로 1%)이 두드러진다. 반면 건강, 보건, 사회보호 (9), 가정경제 안정과 아동보호(12), 에너지 (21), 지방교부세(25) 등의 분야는 상향조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세금과 관계하여 주택보유세 0.75%로 인하, 자동차보험세 신설, 소득세 평균 1,000 크로네 인하, 연금생활자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현행보다 높은 63,000 크로네로 상향조정하고, 일반 노동자 면세한계를 16,800 크로네에서 36,000 크로네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일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조금제를 삭감하거나 폐지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삭감 혹은 폐지하는 보조금으로 노조연회비 30% 공제의 폐지, 실업수당 최대 300일 지급 하루 750 크로네에서 680 크로네로 하향조정, 이후 200일 이후부터는 마지막 봉급의 80%에서 70% 보상, 실업수당요금 300 크로네 인상, 병가수당 최고액

¹¹ Finansdepartementet, 2006/7 Budgetproposition.

33,000 크로네에서 24,800 크로네로 하향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보조금 중에서도 아동보육비 등을 새로 신설하여 지급해 줌으로써 국가 혹은 지방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를 의무적 이용하지 않고 부모에게 선택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자유경쟁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개인병원 설립을 자유화시키고, 종합병원 지역제한의 규정을 삭제했으며, 정신의료시설 강화를 통해 사회의 안전을 더욱 높이려는 시도와 함께, 가족일원 중 한 명이 자녀의 병간호를 할 때 보조금을 지급해 줌으로써 이것도 가족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회의 빈부차를 줄이기 위해 그 동안 너무 치료비가 비싸서 이용을 못하는 저소득층의 치과방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치과병원 방문비 300 크로네 voucher 지급하여 예방치료에 주력하도록 하고, 비싼 치료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 3,000 크로네 이상 치료비는 반액을 보조하고, 15,000 크로네 이상의 고가 치료비 85% 보조를 보조해 줌으로써 빈부격차의 상징이었던 치아건강을 모두 국민이 혜택을 보도록 시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쉽게 하고 청소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19-25세 청년실업자 고용시 고용자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2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외국인 출신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이주한지 3년 이상이 된 이민자를 고용할 때도 고용자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소외계층 중 청소년, 그리고 이민자를 위한 고용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2006/2007 예산안의 주 내용

정책분야	변화내용
세금	주택보유세 0.75%로 인하 (2008년 폐지목표) 자동차보험세 신설 소득세 평균 1,000 공제 연금생활자 63,000크로네 (1단계), 72,000 크로네(2단계)까지 수입 세금면제 일반 임시 노동자 면세한계를 16,800크로네에서 36,000크로네로 상향조정
보조금제 폐지 혹은 축소	노조연회비 30% 공제폐지 실업수당 최대 300일 지급 하루 750크로네에서 680크로네로 하향조정 - 200일 이후부터는 마지막 봉급의 80%에서 70% 보상 실업수당요금 300크로네 인상 병가수당 최고액 33,000크로네에서 24,800 크로네로 하향조정
보조금제 신설	1-3세 아동 보육수당 3,000크로네 지급
청소년실업대책	19-25세 청년실업자 고용시 고용주세 감면
사회복지혜택	치과병원 300 크로네 voucher 지급 - 예방치료 3000크로네 이상 치료비 반액 보조 - 15,000 크로네 이상 치료비 85%

	보조
의료개선	개인병원 설립 자유화 종합병원 지역제한 규정 자유화 - 지역의 자유 선택 정신의료시설 강화 가족 의료원 보조금 지급
환경	대체연료자동차 10,000 크로네 세금공제 핵발전소 건립금지 - 폐기금지 발탁해 연안국가 환경원조금 지급
남녀평등	부부간 낮은 봉급 받는 쪽 출산휴가 사용시 3,000 크로네 지급 (여성의 불이익제거)
이민자정책	이민자3년 고용시 고용자세면제

출처: Finansdepartementet, 2006/7 Budgetproposition.

또한 별첨 5와 6의 세금 수입부분의 비교를 통해 사민당과 보수우익정당들의 국민들의 세금 부담률을 비교해 보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소득세를 낮추는 대신 소비를 진작시켜 부가세 등의 국가세수를 늘리려는 라인펠트 정권의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또한 경제를 활성화시켜 자본수입의 비중을 높여서 세수를 충당하고자 하는 노력도 엿볼 수 있다.

즉 책정된 예산수입과 지출을 볼 때 라인펠트는 2007년부터 국민부담율을 48.1%까지 낮추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민 세金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자본수입과 소비세를 통해 보충하려는 의도이다. 다시 말해 경제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과 일을 할 수 있는 의욕고취,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위화감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함께 국민선택권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민당과의 예산비교에서 보면 일단 라인펠트의 정책내용은 커다란 변화보다는 약간의 계수차원의 복지제도의 개선, 혹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스웨덴 사민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스웨덴의 사민주의는 과연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사민당은 다시 정부의 위치로 돌아올 것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이번 선거의 결과가 복지제도의 실패에 대한 심판, 혹은 국민들의 사민주의에 대한 식상이 주된 요인이 아니고 사민당 장기집권에 대한 정치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심판 혹은 정치인 요란폐손에 대한 심판적 내용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민당이 내년 3월 임시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체제로 당을 재 정비하고,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게 되면 등을 돌렸던 국민들은 다시 집권정당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1976년 후 6년동안 야당으로 있었던 울로프 팔메가 1982년 재집권을 통해 사민당을 새롭게 개혁시켰고, 1994년에도 잉바르 칼손 수상이 똑 같은 전철을 되밟아 왔다. 사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노조의 총성표 이탈이 미지수 이기는 하지만 전통적으로 사민당의 지지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우익정권이 들어서면 다시 회귀하는 노조투표 성향을 생각해 보면 더욱 사민당의

가능성을 높게 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너무 확대해석해서 사민주의의 대참패 혹은 스웨덴 복지제도의 사형선고와 같은 진단을 내리는 것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민당이 집권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난제를 풀어야 가능하다. 먼저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전통적 좌익정책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신자유주의의 흐름속에서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중도정책을 택할 것인가는 아직 당내에서 치열한 노선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스웨덴 경제의 지구화 편입과 EU 가입 이후의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구시장으로의 중소기업 이전 등의 경제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복지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세입원을 찾을 것인가는 사민당이 안고 있는 하나의 딜레마이다.¹² 여기에다 이제 사민당은 30 퍼센트 당으로 고착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좌익계열 정당들인 좌익당과 환경당의 도움없이 단독으로는 정권을 구성할 수 없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소수 단독내각을 수립하고자 할 때 중도보수정당들의 연립대안은 사민당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민당의 선거전략도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창출은 사민당만의 과제는 아니다. 만약 이번 라인펠트 정권이 일자리창출과 소비촉진, 그리고 자유선택을 기초로 한 복지제도의 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상황과 세금의 50 퍼센트가 전체 국민총생산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부담률을 줄여 세수를 줄이면서도 복지제도를 유지하고 할 때, 결국 실험의 성공의 열쇠는 역시 2006 년 선거를 좌우했던 실업문제와 일자리창출에 있다. 만약 계획했던 일자리가 늘지 않을 경우 모든 경제운용계획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라인펠트 정권의 운명이 쉽게 판가름 날 수도 있다. 여기에 4 당의 정책공조도 또 하나의 변수이다. 다양한 정책사안이 4 개당의 동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1976 년 펠딘(Thorbjörn Fälldin) 수상 당시처럼 핵발전소 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공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요란페손이 장담한 것처럼 4 년의 임기가 다 하기 전에 사민당이 의회 제 1 당으로 다시

¹² 현재 스웨덴 사민당은 서비스 산업의 증가와 산업노동자의 감소,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공공세력의 약화, 그리고 우익정당 들의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정책경쟁 등으로 인해 골수 사민주의자들의 세력이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확보, 세계경제와의 관계 등으로 앞으로 놓인 과제는 적지가 않다. 이와 함께 1995년 EU 가입, 2005 년 동구의 EU 진출, 지구화 등의 전개는 사민당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는 요소이다.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국민의 고세율과 고부담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동구이전으로 인한 제조산업의 공동화 현상, 세수의 감소, 실업률의 증가 등은 분명 사민당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는 복지제도 유지를 위한 사민당의 가장 큰 난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Glyn, A. ed., 2003, *Social Democracy in Neoliberal Ti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Kitschelt, H., 1996.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sping-Andersen, G., 1996.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London: Sage; Aylott, N., 1999. *Swedish Social Democracy and European Integration*. London: Ashgate 등을 참조할 것.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¹³ 이것은 역으로 사민당에게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다. 또 한가지 변수는 라인펠트 정권의 실험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소득격차와 지역격차를 유발시킨다면 사민주의의 복귀는 그만큼 쉬워진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사민당은 전통적으로 평등을 기치로 한 정당이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계급갈등을 해결하는데는 사민당이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1990 년대의 어려운 국제정세와 복지제도의 일시적 후퇴를 통해 다시 복지제도의 골격을 유지해 오면서도 일인당 국민총생산 40,000 불 수준의 경제성장을 일궈냈고,¹⁴ 고부담-고혜택의 사회복지모델로도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을 대내외에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사민당을 정점으로 한 스웨덴 모델은 동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¹⁵

¹³ SVT, 2006-9-17일 선거 당일 패배 후 첫 인터뷰에서.

¹⁴ 스웨덴은 높은 세율의 사회복지제도를 유지해 오면서도 일인당 국민소득 20,000 달러를 달성한 1988년 이후 17년 만인 2005년에 39,694 달러를 기록했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2006.). 스웨덴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배가 증가한 이 기간 동안은 국제적으로는 걸프전, 9.11 테러 사태, 이라크침공, 이스라엘 분쟁과 이란 핵실험사태 등으로 유가가 치솟고 국제경기가 전반적으로 불경기에 있을 때 이룩한 점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¹⁵ 스웨덴 모델에 대한 논의는 최연혁, "스웨덴 모델의 정치적 함의와 한국정치", 『시민과 사회』, 2006. 12월 호 참조 (출판예정).

참고문헌

출판물

- Allians för Sverige, *Fler i arbete mer att dela på. Valmanifest 2006*. 더 많은 일자리로 더 많이 나누어 갖자.
- Ayllot, N., 1999. *Swedish Social Democracy and European Integration*. London: Ashgate.
- Esping-Andersen, G., 1996.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London: Sage.
- Finansdepartementet, 2006/7 Budgetproposition.
- Gerassimos Moschonas, *In the Name of Social Democracy*. 1994, London: Verso
- Glyn, A. ed., 2003, *Social Democracy in Neoliberal Tim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2006.
- Finansdepartementet, 2005/6 Budgetproposition.
- Kitschelt, H., 1996.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Social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jöpartiet de gröna, *Grönare Sverige - för ökad livskvalitet*. 보다 더 환경적 스웨덴 한층 높은 삶의 질
- Socialdemokraterna, *Valmanifest 2006. Alla ska med*. 모두 함께 합시다.
- Vänsterpartiet, *Arbete Demokrati Rättvisa. Vänsterpartiets valplattform 2006*. 일자리 민주주의 정의.
- 최연혁, " 스웨덴 모델의 정치적 함의와 한국정치" , 『시민과 사회』 , 2006. 12월 호 참조 (출판예정).

인터넷 매체

- Aftonbladet, <http://www.aftonbladet.se>.
- Allians för Sverige, 공식사이트, <http://www.maktskifte.se/index.htm>.
- Dagens Nyheter 신문 사이트, <http://www.dn.se>.
- Socialdemokraterna, 사민당 공식사이트, <http://www.socialdemokraterna.se/>
- Sverige Television 스웨덴 국영TV 공식사이트, <http://www.svt.se>.

별첨

1. 스웨덴의 역대 선거결과

	s 사민당	m 보수당	c 중앙당	fp 국민당	kd 기독교민주 당	v 좌익당	vänster socialist 사회좌익	socia- listerna 사회당	mp 환경 당	투표율
1911	28.5	31.2	-	40.2	-	-	-	-	-	49.3
1914	30.1	37.1	0.0	32.2	-	-	-	-	-	69.9
1917	31.1	24.7	8.5	27.6	-	-	8.1¹	-	-	65.8
1920	29.7	27.9	14.2	21.8	-	-	6.4	-	-	55.3
1921	36.2	25.8	11.1	19.1	-	4.6	3.2	-	-	54.2
1924	41.1	26.1	10.8	16.9	-	5.1	-	-	-	53.0
1928	37.0	29.4	11.2	15.9	-	6.4	-	-	-	67.4
1932	41.7	23.5	14.1	11.7	-	3.0	-	5.3	-	68.6
1936	45.9	17.6	14.3	12.9	-	3.3	-	4.4	-	74.5
1940	53.8	18.0	12.0	12.0	-	3.5	-	0.7	-	70.3
1944	46.7	15.9	13.6	12.9	-	10.3	-	0.2	-	71.9
1948	46.1	12.3	12.4	22.8	-	6.3	-	-	-	82.7
1952	46.1	14.4	10.7	24.4	-	4.3	-	-	-	79.1
1956	44.6	17.1	9.4	24.8	-	5.0	-	-	-	79.8
1958	46.2	19.5	12.7	18.2	-	3.4	-	-	-	77.4
1960	47.8	16.5	13.6	17.5	-	4.5	-	-	-	85.9
1964	47.3	13.7	13.4	17.1	1.9	5.2	-	-	-	83.9
1968	50.1	12.9	15.7	14.3	1.5	3.0	-	-	-	89.3
1970	45.3	11.5	19.9	16.2	1.8	4.8	-	-	-	88.3
1973	43.6	14.3	25.1	9.4	1.8	5.3	-	-	-	90.8
1976	42.7	15.6	24.1	11.1	1.4	4.8	-	-	-	91.8
1979	43.2	20.3	18.1	10.6	1.4	5.6	-	-	-	90.7
1982	45.6	23.6	15.5	5.9	1.9	5.6	-	-	1.7	91.4
1985	44.7	21.3	12.4	14.2	-	5.4	-	-	1.5	89.9
1988	43.2	18.3	11.3	12.2	2.9	5.8	-	-	5.5	86.0
1991	37.6	21.9	8.5	9.1	7.1	4.5	6.7 (NyD) ²	-	3.4	86.7
1994	45.3	22.4	7.7	7.2	4.1	5.0	1.2	-	6.2	86.8
1998	36.4	22.9	5.1	4.7	11.7	12.0	-	-	4.5	81.4
2002	39.9	15.3	6.2	13.4	9.1	8.4	-	-	4.6	80.0
2006	35.2	26.1	7.9	7.5	6.6	5.8	-	-	5.2	81.6

1. 사민당내 사상 논쟁에서 입헌군주제에서 공화정으로의 체제개혁을 주장한 Zeth Höglund과 Fredrik Ström이 주도하여 세운 정당.
2. 스웨덴 정당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회에 진출했던 신민주당 (New Democrats)은 극우정당이다. 경제위기 이후 1991년 우익정권이 들어설 때 함께 의회에 진출했으나 곧 다음 선거에서 퇴출되었다.

2. 2006년 선거결과 (지역별)

Område	M	C	FP	KD	S	V	MP	ÖVR	BLANK	OG	VDT
Blekinge län	21,8%	7,2%	6,4%	5,2%	42,5%	5,4%	3,6%	7,9%	1,8%	0,3%	82,0%
Dalarnas län	20,9%	11,0%	5,1%	5,4%	40,5%	6,6%	4,2%	6,2%	2,1%	0,2%	78,7%
Gotlands län	21,3%	19,6%	4,3%	3,9%	35,3%	5,9%	5,9%	3,8%	2,6%	0,3%	78,7%
Gävleborgs län	18,3%	11,2%	5,3%	5,1%	41,9%	7,9%	4,2%	6,1%	1,8%	0,2%	77,9%
Hallands län	29,5%	10,4%	7,7%	6,7%	31,8%	3,9%	4,0%	6,0%	2,0%	0,2%	82,4%
Jämtlands län	17,4%	16,9%	4,1%	3,7%	40,4%	8,3%	4,9%	4,2%	2,0%	0,2%	77,9%
Jönköpings län	22,0%	8,5%	5,3%	16,1%	35,6%	4,2%	3,4%	4,9%	1,7%	0,2%	82,2%
Kalmar län	21,2%	11,1%	5,2%	7,1%	41,6%	5,0%	3,7%	5,1%	1,8%	0,2%	80,9%
Kronobergs län	24,6%	11,3%	5,7%	8,0%	36,2%	4,9%	4,2%	5,3%	1,8%	0,2%	81,5%
Norrbottnens län	13,3%	6,4%	4,2%	4,2%	51,8%	10,5%	4,0%	5,6%	1,1%	0,2%	80,3%
Malmö kommun	28,4%	2,9%	8,8%	3,5%	35,6%	5,4%	6,0%	9,5%	1,4%	0,2%	76,0%
Skåne läns norra och östra	27,3%	8,3%	7,1%	6,7%	35,3%	3,4%	3,3%	8,5%	2,0%	0,2%	78,7%
Skåne läns södra	32,9%	6,0%	9,1%	4,8%	30,5%	3,4%	4,7%	8,5%	1,5%	0,2%	83,1%
Skåne läns västra	28,5%	5,7%	8,5%	4,9%	35,1%	3,3%	3,6%	10,4%	1,6%	0,2%	79,0%
Stockholms kommun	34,9%	5,7%	10,1%	5,1%	23,3%	7,4%	9,3%	4,3%	1,3%	0,2%	79,9%
Stockholms län	38,3%	5,3%	9,2%	6,7%	26,3%	4,7%	5,5%	4,1%	1,4%	0,2%	81,0%
Södermanlands län	23,3%	6,9%	6,8%	6,2%	42,4%	4,9%	5,1%	4,4%	1,9%	0,2%	80,9%
Uppsala län	26,4%	9,9%	9,0%	6,6%	31,1%	5,7%	6,2%	5,1%	1,7%	0,2%	81,2%
Värmlands län	20,8%	10,0%	6,0%	5,8%	42,3%	6,4%	3,8%	5,0%	1,7%	0,2%	79,8%
Västerbottnens län	13,6%	11,8%	6,3%	6,5%	44,0%	8,3%	5,8%	3,6%	1,5%	0,2%	81,3%
Västernorrlands län	17,1%	10,6%	5,4%	5,7%	46,1%	6,6%	3,7%	4,8%	1,5%	0,2%	79,9%
Västmanlands län	23,1%	6,9%	8,1%	5,7%	40,0%	6,2%	4,2%	5,7%	2,1%	0,2%	79,4%
Göteborgs kommun	26,7%	4,5%	10,2%	6,8%	29,2%	8,7%	8,4%	5,6%	1,5%	0,2%	77,1%
Västra Götalands läns norra	21,1%	8,9%	7,4%	8,1%	38,7%	5,8%	4,7%	5,3%	1,8%	0,2%	81,4%
Västra Götalands läns södra	23,8%	9,6%	6,5%	8,0%	35,8%	5,5%	3,9%	6,9%	1,7%	0,2%	81,3%
Västra Götalands läns västra	26,3%	7,3%	9,6%	8,7%	32,3%	5,2%	4,8%	5,7%	1,7%	0,2%	82,3%
Västra Götalands läns östra	23,4%	10,5%	5,4%	8,2%	38,6%	5,1%	3,6%	5,2%	1,8%	0,2%	81,5%
Örebro län	18,7%	7,5%	6,6%	7,2%	43,4%	6,0%	4,5%	6,2%	1,7%	0,2%	81,5%
Östergötlands län	24,7%	7,6%	6,5%	7,2%	37,6%	5,2%	5,0%	6,2%	1,9%	0,2%	82,1%

3. 2006/2007 예산안 (1,000 kronor)

Utgiftsområde 1	Rikets styrelse	10 676 842
Utgiftsområde 2	Samhällsekonomi och finansförvaltning	11 873 471
Utgiftsområde 3	Skatt, tull och exekution	9 324 773
Utgiftsområde 4	Rättsväsendet	30 753 868
Utgiftsområde 5	Internationell samverkan	1 497 701
Utgiftsområde 6	Försvar samt beredskap mot sårbarhet	44 163 964
Utgiftsområde 7	Internationellt bistånd	26 656 588
Utgiftsområde 8	Migration	5 032 876
Utgiftsområde 9	Hälsovård, sjukvård och social omsorg	46 905 439
Utgiftsområde 10	Ekonomisk trygghet vid sjukdom och handikapp	122 354 688
Utgiftsområde 11	Ekonomisk trygghet vid ålderdom	44 201 500
Utgiftsområde 12	Ekonomisk trygghet för familjer och barn	62 630 664
Utgiftsområde 13	Arbetsmarknad	66 650 378
Utgiftsområde 14	Arbetsliv	1 360 715
Utgiftsområde 15	Studiestöd	20 714 471
Utgiftsområde 16	Utbildning och universitetsforskning	44 213 871
Utgiftsområde 17	Kultur, medier, trossamfund och fritid	10 139 013
Utgiftsområde 18	Samhällsplanering, bostadsförsörjning, byggande samt konsumentpolitik	5 730 472
Utgiftsområde 19	Regional utveckling	3 162 689
Utgiftsområde 20	Allmän miljö- och naturvård	4 615 427
Utgiftsområde 21	Energi	2 708 501
Utgiftsområde 22	Kommunikationer	33 914 339
Utgiftsområde 23	Jord- och skogsbruk, fiske med anslutande näringar	18 000 600
Utgiftsområde 24	Näringsliv	4 128 715
Utgiftsområde 25	Allmänna bidrag till kommuner	72 849 399
Utgiftsområde 26	Statsskuldsräntor m.m.	43 170 000
Utgiftsområde 27	Avgiften till Europeiska gemenskapen	28 908 000
Summa utgiftsområden		776 338 964
Minskning av anslagsbehållningar		-329 224
Summa utgifter		776 009 740
Myndigheters m.fl. in- och utlåning i Riksgäldskontoret, netto		14 590 000
Kassamässig korrigerering		0
Summa		790 599 740

출처: Finansdepartementet, 2006/7 Budgetproposition.

4. 2005/2006 예산안 (1,000 kronor)

Utgiftsområde 1	Rikets styrelse	8 244 204
Utgiftsområde 2	Samhällsekonomi och finansförvaltning	11 808 870
Utgiftsområde 3	Skatt, tull och exekution	9 222 029
Utgiftsområde 4	Rättsväsendet	29 022 913
Utgiftsområde 5	Internationell samverkan	1 358 949
Utgiftsområde 6	Försvar samt beredskap mot sårbarhet	43 433 124
Utgiftsområde 7	Internationellt bistånd	26 058 663
Utgiftsområde 8	Invandrare och flyktingar	6 981 155
Utgiftsområde 9	Hälsovård, sjukvård och social omsorg	41 614 573
Utgiftsområde 10	Ekonomisk trygghet vid sjukdom och handikapp	129 590 962
Utgiftsområde 11	Ekonomisk trygghet vid ålderdom	45 299 000
Utgiftsområde 12	Ekonomisk trygghet för familjer och barn	61 460 291
Utgiftsområde 13	Arbetsmarknad	70 229 969
Utgiftsområde 14	Arbetsliv	1 224 138
Utgiftsområde 15	Studiestöd	22 130 455
Utgiftsområde 16	Utbildning och universitetsforskning	47 113 274
Utgiftsområde 17	Kultur, medier, trossamfund och fritid	9 582 406
Utgiftsområde 18	Samhällsplanering, bostadsförsörjning och byggande	9 548 841
Utgiftsområde 19	Regional utveckling	3 332 913
Utgiftsområde 20	Allmän miljö- och naturvård	4 556 166
Utgiftsområde 21	Energi	1 721 950
Utgiftsområde 22	Kommunikationer	31 534 968
Utgiftsområde 23	Jord- och skogsbruk, fiske med anslutande näringar	16 398 229
Utgiftsområde 24	Näringsliv	4 199 220
Utgiftsområde 25	Allmänna bidrag till kommuner	60 160 910
Utgiftsområde 26	Statsskuldräntor m.m.	43 170 000
Utgiftsområde 27	Avgiften till Europeiska gemenskapen	28 066 000
Summa utgiftsområden		767 064 172
Minskning av anslagsbehållningar		1 263 687
Summa utgifter		768 327 859
Myndigheters m.fl. in- och utlåning i Riksgäldskontoret, netto		14 760 000
Kassamässig korrigering		0
Summa		783 087 859

출처: Finansdepartementet, 2005/6 Budgetproposition.

5. 라인펠트 정권 하에서 2006/2007 예산안에서 산출된 국가 세금내역

Miljarder kronor och procent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Totala skatteintäkter	1 297	1 376	1 429	1 447	1 512	1 581
skatt på arbete	825	850	878	886	924	965
skatt på kapital	136	171	181	171	179	189
skatt på konsumtion	338	358	376	398	416	434
övriga skatter	-2	-3	-6	-7	-7	-7
BNP	2 573	2 673	2 830	3 007	3 163	3 320
Skattekvot	50,4	51,5	50,5	48,1	47,8	47,6

출처: Finansdepartementet, 2006/7 Budgetproposition.

6. 사민당 정권하에서 2005/2006 예산안에서 산출된 국가 세금내역

Miljarder kronor och procent (kursivt)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Totala skatteintäkter	1 233	1 296	1 329	1 382	1 447	1 515
varav						
Skatt på arbete	800	823	839	873	918	961
Skatt på kapital	108	135	139	142	149	157
Konsumtionsskatter	328	338	353	369	383	400
Övriga skatter	-3	0	-2	-3	-3	-3
varav						
Off. sektorns skatter	1 224	1 288	1 321	1 373	1 438	1 505
EU-skatter	9	8	8	8	9	10
Skattekvot	50,6	50,9	50,7	49,9	49,8	49,8
<i>Exkl. transfereringar</i>	<i>46,3</i>	<i>46,6</i>	<i>46,5</i>	<i>45,9</i>	<i>45,9</i>	<i>45,9</i>

출처: Finansdepartementet, 2005/6 Budgetproposition.

Abstract

In 2007, the Swedes witnessed a government shift from Social Democratic rule to right-wing oriented party coalition consisting of the Conservative Moderate party, the Peoples' party, the Center party and the Christian Democratic party. After the September election with 1.9 percent point marginal,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its two coalition partners, i.e. (the Left party) and the Green party, left their ruling position in the Riksdag, the Swedish Parliament. Some plausible reasons among others are: 1) Social Democratic failure of election strategy against four-party election campaign, 2) failure of unemployment policy specially among the younger generations between twenties and thirties, 3) failure of maximizing left-wing votes of the workers, 4) Person's scandal on exclusive house owned by Mr. and Mrs. Persons aired on TV three days before the election-day, 5) weakened party strength of the two supporting parties of the Left party and the Green party and 6) enlarged numbers and their party support pattern of the floating (undecided) voters until the last election campaign days. The government shift will result in policy changes under the ruling four-party coalition such as distribution policy such including tax policy as well as social policy areas. However, the failure of the economic policy including labor market policy under the coalition government will pave the road for the early Social Democratic return. It can also be argued that the Social Democratic hegemony can be challenged without stable support of the rest of left-oriented parties and workers' organized supports.

Yonhyok Cho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Södertörn University College.